

해외 증시·공장 투자 증가... '경상흑자=원화강세' 공식 깬다

역대 두번째 '경상수지 흑자'에도 1500원대 환율 '원화약세' 지속 "시장 대응만으로 환율안정 한계 투자소득 환율 등 함께 이뤄져야"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282억9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의 원화 환전 효과는 해외 증권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에 일부 상쇄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도 현재에 재투자되면서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를 1527.0원에 마감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흑자와 고환율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Chat GPT가 생성한 원화 약세 이미지.

말 정책금리 전망을 3월 3.4%에서 6월 3.8%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을 2.7%에서 3.6%로 올린 것이 단기적인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또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 배경에는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 투자소득의 제한적인 국내 환류도 자리하고 있다.

◆ 해외 투자가 환율 약세 요인

한은의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2024년 670억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7.5%로 뛰어 일본의 2.3%를 웃돌았다.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업, 개인 등이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한다. 수출기업이 벌여

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도 해외자산 매입을 위한 달러 수요가 이를 흡수하면 외환시장의 순달러 공급 효과와 원화 강세 압력은 약해진다. 수출기업이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 투자와 원자재 결제에 사용해도 원화 환전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4월 경상수지와 연간 해외 증권투자는 기간과 항목이 다른 만큼 일대일로 상쇄되는 수치는 아니다. 다만 경상수지 통계상 흑자와 국내 현물환시장에 실제 공급되는 달러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모형에서는 해외투자가 평균 수준보다 약 3% 늘어나는 충격이 원·달러 환율을 약 0.7%포인트(p)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 해외에서 번 이익도 현지에

해외자산에서 이자와 배당을 벌여도 모두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본사에 배당하지 않고 현지 공장 증설 등에 다시 투자하면 통계상 투자소득으로 잡히지만 국내로 실제 유입되는 달러는 없다.

한국의 재투자수익수입 비중은 2010년 이후 평균 40%로 독일 28%, 대만 18%보다 높고 일본 46%에 근접했다. 한은 분석에서는 투자소득이 평균보다 약 8% 늘면 환율을 약 0.4%p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재투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환율을 약 0.4%p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이 늘어도 현지에 남으면 외환공급 효과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해외투자 확대는 투자소득을 늘리고 외화유동성과 대외지급능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환헤지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생산성과 투자수익률을 높여 자금의 해외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은 외환시장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소득의 환류 기반 확충과 국내 성장잠재력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특정임원 업무 집중... 책무구조도 이해 부족

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완료 내달 2일부터 여전사·저축은행에 도입

여전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특정 임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업권의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보완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 앞서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52개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전체 회사 중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24년 하반기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전 진단 결과,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 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경영관리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가 편중된 점이 보완 사항으로 꼽혔다. 경영관리 임원에게 관련 책무뿐만 아니라 금융 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까지 배분된 사례가 포착됐다.

다수 임원이 유사한 상품·서비스 책무를 분담하면서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내용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임원이 책무와 관련해 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

임을 뜻하는 책무 세부 내용과 이를 위한 수단인 주요 관리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게 혼재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책무와 무관한 세부 내용, 관리의무를 기재하거나 다수 회사가 동어반복으로 관리의무 내용과 책무 세부 내용을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지난해 금융투자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내용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미흡한 점을 금융사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안내 의무화

금감원, 알권리 강화... 행정지도 추진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안내 의무는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판결 등으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후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

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이를 막고자 소비자 안내의무를 신설했다. 보험회사는 대법원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에 따라 심사 기준을 변경(이하,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 안내 시에는 알람톡, 애플리케이션(앱) 등 최소 2개 이상의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홈페이지 공시도 의무화됐다. 공시에는 중요한 심사 기준 변경의 근거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및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변경된 심사 기준은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적용해야 한다.

/안재선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CEO 금융보안 세미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벅커스클럽에서 금융보안원과 함께 '저축은행 CEO 금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오하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외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들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축은행 CEO가 알아야 할 금융보안 이슈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신 금융보안 정책과 보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호진 보안연구부장이 최신 금융보안 정책 동향과 금융권 영향을 소개했다. 이어 김기철 침해대응부장이 금융권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김성용 인공지능(AI)혁신부장이 금융권 AI 추진 현황과 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안재선 기자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10조 추가

생산적금융 9.4조, 포용금융 6000억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생산적금융에 9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도 추가 공급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점검했으며, 생산적금융에 9조4000억원, 포용금융에 6000억원 등 10조원을 추가 투입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을 조기에 추가 공급한다. 특히 실물 경제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우리금융그룹 CEO들이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상품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포용금융 공급 목표도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까지 늘려 조기 지원에 나선다. 은행·카드·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해 금융안정망 역할을 확대하고,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체채권 소각도 확대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이번주 전국 10개 단지서 620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GS건설 '북오산자이드포레' 등

6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62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375가구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국제신도시수자원하우스',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드포레',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2단지' 등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북오산자이드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15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병담-동탄)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고 수도권 1호선 세마역과 오산대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동탄일반산업단지 등의 기업이 가까이 자리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 앞 내삼미1초교(가칭) 부지가 계획돼 있고, 필봉산과 오산천이 인접한다. 동탄신도시와 접하고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센트럴아이파크', 경북 경산시 중산동 '벤티힐즈W'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